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복거일 소설가·사회평론가

약소국의 설득력

제였다. 당연히, 중국은 신의 없는 한국을 아주 알잡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사드' 문제는 문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문제 삼은 것은 '트집을 위한 트집'이었다. 그러나 우리 군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되자, 중국은 점점 강경해졌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사드에 반대하자, 시진핑 주석까지 나섰다. 시 주석의 체면이 걸렸으니, 중국의 보복은 오래갈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은 듯하다. 그러나 그들은 문 대통령의 얘기를 자세히 듣기도 전에 거부했다. 북한은 점점 위협적인 미사일을 선보였고, 중국은 사드 보복을 풀 기색이 없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어렵다는 것은 정상회담에서 확인되었다. 시 주석이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라는 모욕적 발언을 했네, 안 했네 논란이 나오는 것에서 회담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아췌든, 중국과 북한을 설득해서 한반도의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자신의 야심이 환상이었을 운 문 대통령은 깨달은 듯하다.

외교력은 국력에 비례한다. 강대국은 자신의 의지를 약소국에 강요하고, 약소국은 더 큰 불이익을 겁내어 강대국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인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설득하기는 힘들다. 우리와 중국처럼 힘의 비대칭이 심하고 체제까지 다른 경우엔, 특히 힘들다. "설득은 약한 자의 자원이다. 그리고 약한 자가 설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에드워드 기번의 얘기가 아프게 떠오른다.

우리가 중국을 설득할 힘이 전혀 없다면 얘기는 아니다. 국제 관계는 다자 경기(n-person game)이므로, 중국과 우리가 다투면, 중국도 손해를 본다. 바로 그런 사정이 약소국 한국이 강대국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대국과의 동맹이라는 자원이 있다. 시 주석이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라고 말했다 때, 문 대통령은 바로 그 말을 받았어야 했다. "혈맹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우리가 혈맹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운 16개국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혈맹은 튼튼합니다."

그것으로 족했다.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었다. 한국전쟁 당시나 지금이나 미국

이 중국보다 훨씬 강한 나라임을, 지금 한국은 중요하고 활기찬 나라지만, 북한은 파산해서 중국의 도움 없이는 쓰러질 나라임을.

우리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 잘 인식하지 못한 경우엔, 특히 힘들다. "설득은 약한 자의 자원이다. 그리고 약한 자가 설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에드워드 기번의 얘기가 아프게 떠오른다.

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자원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니는 뛰어난 도덕성이다. 왜 우리 지도자들은 중국에 말하지 못하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은 부도덕하며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돕고 감싸는 것은 더욱 부도덕하다는 사실을. 다자 경기인 국제 관계에서 도덕은 근본적 요소고, 통념과 달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종교칼럼



장헌권 사정교회 담임목사

평화를 위한 작은 날갯짓 -성주 엄마들에게 보내는 편지

구매 비용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10억 달러(1조 1600억 원)입니다. 10억 달러 장비 비용 말고도 부지 비용, 기반시설 구축비, 운영유지비용 매년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엄마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인 액수의 돈입니다. 사실 엄마들은 자녀 교육비, 생활비만으로도 벅걸지요. 참으려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엄마들의 삶속에 괴물 같은 사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들이 분노한 것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한 대가는 중국의 사드 부지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으로 우리의 안보가 결정적으로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외교부의 사드 부지 제공이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밝혀 지기도 했지요. 국방부의 사드 부지 공사도 사전공사를 금지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채 진행되고 있고요. 이 모두 엄마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소성리 마을 사람들 열심히 '사드는 안 된다'는 투쟁을 가열차게 하고 있지요.

"지금 그것 미사일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 됩니다." 이처럼 엄마들의

외침은 처절합니다. 어디보다도 보수적이었던 경상도 성주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사드 배치 반대 투쟁 중심에는 젊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처음에 엄마들은 전자파로 아이들이 입을 피해가 걱정이 되어 투쟁을 시작했지만, 하지만 사드에 대해 알아 갈수록 우리나라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는 무기를 알게 된 것이지요. '파란나비효과'에 출연한 엄마들 배미영,이수미,김정숙,이희동,배정하,이국민,배은하 등 엄마들의 의식 변화가 행동으로 옮겨가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사회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던 엄마들이 이제는 누구보다 앞장 서서 한반도 평화를 노래하며 별고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볼 때 눈물겹도록 고마운 엄마들입니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엄마들은 지지하지 않고 앞장 서 투쟁을 하고 계시지요. 나이 먹은 노인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유인물을 드리면서 홍보를 하는 엄마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있지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엄마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광주 5월 어머니들이 생각합니다. 또한 세월호 엄마들도 울

공음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이처럼 엄마들의 작은 외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망이 되고 있지요.

내밀하고 섬세한 엄마들의 이야기에 국민이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평화를 위한 작은 날갯짓이 분단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일임을 아시고 엄마들을 응원하면서 '사드는 가고 평화 오라' 줄시를 보내 드립니다. "하늘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출렁 거린다/ 땅에는 천만 촛불이 반짝거린다 / 하루가 지나고 이를 사들 나를 그렇게 100일 200일이 넘게/ 촛불은 별이 되었다/ 별은 촛불이 되었구나// 여기서 바로 성주 별고을이다/ 우리가 평화 촛불이다/ 촛불을 든 빈손에는 평화의 손들이 모여 기도를 한다/ 질곡의 여물을 견어 내고/ 고요한 읍성이 카랑카랑한 별빛 마을 외침이다/ 사드 가고 평화오 라고 얼마나 얼마나 조용한 마을을 흔들어 깨우는가// 예고도 없이 막무가내로 무단 침입한 평화를 유린하는 잔인한 괴물이구나/ 생명 마을 짓밟고 있는 자들이 들어라/ 평화의 동네 천팔만자들이 들어라/ 한반도를 넘보는 강도들이 들어라."

기고

'대학생 취업' 대학·정부·기업 3박자 맞아야

기업들의 취업과 관련이 있는 업체이어서 그런지, 그 업체로 우리 학생들의 실습을 보내 달라는 부탁과 실습을 하면서 품성이 좋고 열심히 일하는 학생은 취업을 예약받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이 기쁘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신입 사원 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대신 신입 사원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정부는 세제나 금융 혜택, 기술 지원, 수출입 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대학생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쪽은 기업이 아닌가 싶다. 졸업생 취업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대학생들을 많이 채용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신입 사원을 뽑지 않으면 블라인드 채용이든, 대학교수의 기업 방문이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기업에서 채용을 해야, 즉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대학에서 졸업생을 취업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민간 기업까지 대대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시킬 방안이라니 적극 찬성한다.

정부에서 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신입 사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기업에서 신입 사원 채용은 곧 임금의 지출이기에 기업의 성장에 맞추어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신입 사원 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대신 신입 사원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정부는 세제나 금융 혜택, 기술 지원, 수출입 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불만이, 이제는 능력만 있으면 공무원도 되고 공기업도 취업할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으로 변했으면 한다. 또한 기업은 직권과 동반자적 관점에서 공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직장이며 내가 뼈를 묻을 직장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기업주는 직원에게 최선을 다해 대우해 주어야 한다. 직원이 있어야 기업이 유지되고, 직원의 사기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생각으로 직원 한 명 한 명을 고귀한 존재로 인간 관리 할 때에 그 기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연이나 학연이 없어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될 수 있고, 취업 이후에는 평생직장으로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많아지며,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지원이 기업을 살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대학과 정부 그리고 기업이 서로 협조하여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 청년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방도 나라도 산다

지역신문의 발전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최근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 주최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한국지방신문협회장인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 박병석 전 국회의부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유성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국민의당)과 각당의 교문위 간사 등 국회의원 21명, 나중민 문체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시법으로 묶여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화하고 일반법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촉구했고, 국회의원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여창환 매일신문 발행인은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은 없고 수도권만

있는 나라가 됐다"며 "지역 언론이 있어야 지역 발전도 담보될 수 있고 균형 잡힌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성업 교문위원장은 "지역신문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반드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고길·소멸돼 가고 있는 지역발전기금의 복원을 통한 건전한 지역 언론 육성, 정부의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 촉구 등이 있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가 2005년부터 전국의 지역 일간지와 주간지에 지원해 오고 있으나 최근 기금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두 차례 연장을 걸쳐 지원 기간을 늘렸으나, 현재 기금 고갈과 한시법이 품고 있는 소멸 위험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또 일반법으로 전환해 정부의 통 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정운영계획'에 대거 포함된 지역 현안

문재인 정부의 설계도이자 향후 국정운영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전남 지역 현안이 대거 포함됐다. 광주와 전남 지역 공약 각각 8건과 상상 공약 3건 등 총 19건이다. 현 정부가 광주·전남의 경제적 여건과 낙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00대 국정 운영과제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채택되면서 광주시는 5·18항쟁의 현대사적 가치를 완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의 주요 사업으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이전 부지에 스마트시티 조성,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 미래형자동차생산기지 및 부품단지조성,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창출,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산업생태계조성, 원도심재생 뉴딜정책 등 현안 사업이 대부분 채택됐다. 무엇보다

광주시로서는 군공항 이전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 역시 숙원이었던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과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이 대다수 반영됐다. 국정 과제로는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목포에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조선조선 특화산단 조성, 광주공항 이전과 연계한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서남해권해양에너지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다.

이제 국정과제로 채택된 광주·전남의 현안이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빠지지 않고 실천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정부 요직에 오른 광주·전남 출신 인사와 여·야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완전히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힘을 합쳐 매년 국정 과제 추진 사항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범죄를 쫓아 놓은 듯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한다. 모델인 쿨루드라는 여성이 배꼽띠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자신의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이 된 것이다.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에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옷 '아바야'를 입고 검은 베일로 얼굴도 가리도록 돼 있다. 사우디 국민 사이에서는 "처벌해야 한다", "의복 규제법을 고쳐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에게도 그다지 '먼 나라 얘기'만 아니다. 여성의 치마 길이가 무릎 위 20cm 이상 올라갈 경우 경찰이 단속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단속 근거는 1950년대 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었는데 1973년 개정되면서 용모·복장을 규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단속 조항은 "공중의 눈에 띄는 장난한 명 한 명을 고귀한 존재로 인간 관리 할 때에 그 기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연이나 학연이 없어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될 수 있고, 취업 이후에는 평생직장으로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많아지며,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지원이 기업을 살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대학과 정부 그리고 기업이 서로 협조하여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 청년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경범죄 처벌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의 징벌 단속은 현재 중·장년들에게는 추억이 됐다. 중·고교에서는 교사가 일명 '바리깡'을 들고 다니며 그 속도로를 내듯 학생의 머리카락을 밀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제는 매년 열리는 '추억의 총장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요즘 '미니스커트' 교복을 입는 여학생들이 들으면 눈이 휘둥그레질 일이다.

경범죄 처벌법은 거의 사문화됐지만 아직도 '과다노출' 조항을 두고 용모와 복장을 규제하고 있다.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가의 누드 퍼포먼스까지 종종 논란이 되는 것도 이 법이 있기 때문이다. 인문정신과 자유주의가 정점에 다다른 이 처벌 조항도 사라질 수 있을까. 자유와 억압에 민감한 인문학자들이 개인의 자유를 문제 삼는 사회는 으스스하다고 지적하니 말이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